

|            |           |
|------------|-----------|
| 코스피        | 코스닥       |
| 3184.42    | 796.81    |
| (+12.07)   | (+2.81)   |
| 금리 (미국 9년) | 환율 (원·달러) |
| 2.475      | 1392.10   |
| (+0.025)   | (+1.10)   |

# 조선업 훈풍에도 ‘노조 리스크’... 공정 차질·신뢰 흔들

HD현대 조선 3사 파업 잇따라  
노란봉투법 앞두고 강도 높아져  
해외거점 확장에도 불확실성 ↑  
철강·車 등 제조업 전방위 확산

국내 조선업계가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 현장에서는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파업 강도가 높아지면서 공정 차질과 대외 신뢰도 추락 우려가 제기된다.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해외 이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 조선 3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조선·HD현대삼호중공업)는 전날 첫 부분 파업에 이어 이날 하루 4시간 부분 파업을 겪었다. 노조는 4일과 5일에는 파업 시간을 7시간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다섯 차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최근에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조선 합병 문제까지 겹치며 노사갈등이 한층 심해지는 양상이다. 노조는 이번 합병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고용 불안과 전환 배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노조는 “울산 생산 현장이 단순 하청 기지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정규직 신

규 채용 확대, 숙련 노동자 처우 개선, 강제 전환배치없는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2일 ‘2025년 임금교섭 타결 조인식’을 열고 정규직 노조와 합의에 도달했지만 하청지회와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 측은 “공장 점거 파업 재발 방지와 사과 약속에 관한 조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하청지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협력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HD현대는 전날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첫 선박 건조에 돌입하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알렸지만 업계에서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새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공정 지연뿐 아니라 대외 신뢰도까지 추락할 수 있다”며 “최근 마스가 프로젝트 등으로 국내 조선업계에 유례 없는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로 산업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갈등은 조선업에만 국한되지



더 굳건해진 北·中·러 동맹... 新냉전시대 오나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참석 정상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3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의 텐안먼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않고 주요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자동차와 철강 업종 노조도 잇따라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부터 5일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3~4일에는 출근조별로 2시간씩, 5일에는 4시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고난도 시술부터 AI 진단까지 K-의료기기, 글로벌 공략 가속

파인메딕스·메디웨일·유한양행  
해외인증·승인으로 성장 본궤도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난도 시술기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K의료기기의 경쟁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파인메딕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증을 늘리며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파인메딕스의 진단 내시경 시술 기구 ‘클리어 팁 EUS-FNA/FNB’ 2세대가 시판전신고(510K) 허가를 승인받았다.

클리어 팁은 초음파 내시경에서 병변 진단을 위해 조직 샘플을 채취하는 세침흡입술에 사용하는 기구다. 국내 기업으로는 파인메딕스가 처음 국산화에 성공해 2017년 7월 1세대 제품을 출시했고 2018년 11월 미국 FDA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후 2023년 세계 최초로 버튼형 구조로 설계한 2세대 제품을 내놓으며 핵심 고급 제품군을 확대 구축했다.

파인메딕스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사업 영역을 넓혀 수익성 개선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에는 브라

질 위생감시국에서 클리어 팁 1·2세대 모두에 대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해 중남미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

전성우 파인메딕스대표는 “이번 FDA 승인은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고 시장 공략의 속도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글로벌 내시경 시술기구 시장에서 존재감을 증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 인공지능 기업 메디웨일도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2026년까지 미국 FDA에서 ‘닥터는 CVD’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메디웨일의 ‘닥터는 CVD’는 간편한 눈 검사만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기존 심장내과에서 표준으로 이뤄지는 예측 검사인 심장 CT(컴퓨터 단층촬영)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췄다.

이와 함께 메디웨일은 특허 전략을 구축해 닥터는 CVD 제품력을 강화한다. 메디웨일이 미국에서 망막 영상을 활용한 질환 예측 기술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는 총 6건이다. <4면에 계속>

/이청하 기자 mlee236@

## 기술탈취 증거개시제, 실효성 vs 우려 교차

與, 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전문가 현장조사로 증거 확보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민사소송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기업의 증거 확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가 직접 기술탈취 현장을 조사하고 확보해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기업의 영업기밀이 오히려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 도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증거개시제도는 미국과 같은 영미법 체계에서 재판 전에 당사자들이 소송과 관련된 서류 및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소송

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거를 미리 교환해 소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있고, 주요 증거는 피고 측에 있는 경우가 많아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보전제도와 문서제출명령이 있으나,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례로 국내에 증거개시 절차 미흡으로 기술탈취 갈등을 겪는 기업이 증거개시절차가 마련된 국외에서 소송을 해 대규모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국익에 저해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당국의 수사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고소·고발이 이어져 사법기관의 업무량

이 과다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은 특허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제조물책임법·실용신안법을 한데 묶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법안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돼 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핵심은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자료보전명령’ 제도와, 미국에서 시행하는 ‘당사자신문 제도’의 도입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마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도 올해 정기국회 ‘공정경제’ 분야대표 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놓고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與초선, 나경원에 “국회 기능 훼손... 70명 이  
으로 윤리위 제소”  
▲홍준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그러다 ‘이  
재명 총통제’ 말 나와” /사진 뉴시스

▲여 “원민경, 여가부 장관 적임자” vs 야 “피해  
호소인 왜 침묵했나”  
▲김정은·시진핑·푸틴 천안문 망루에... ‘한미일’  
對 ‘북중러’ 대립 구도 심화

▲국힘 “여학생 뺨때리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자  
격 없어... 사퇴하라”  
▲장동혁 “尹 접견 적절한 시기·방식 고민... 전당  
대회 약속 지킬 것”